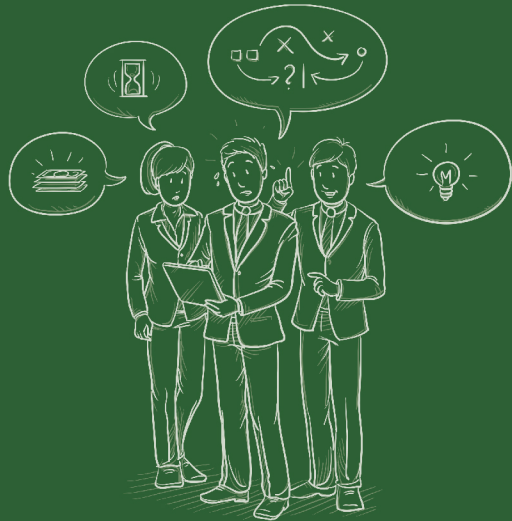


STEP 2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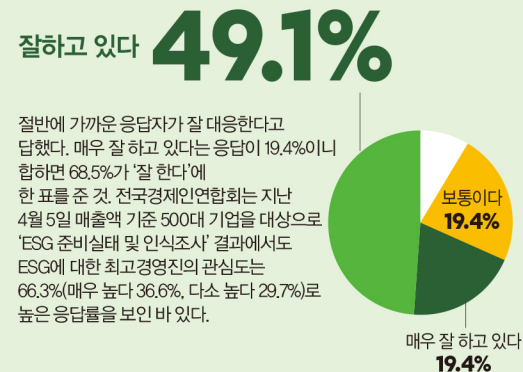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번 설문조사는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ESG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조·금융·유통 등 다양한 기업들의 실무자들에게 ESG 경영 현황과 그들의 고민을 물어봤습니다. 이 중 108개 기업이 보내온 답변들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얼마나 ESG 투자 흐름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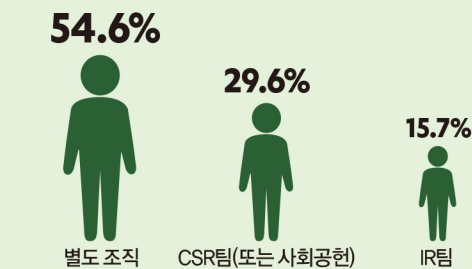
Q1

근무하는 회사는 ESG에 잘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

회사에서 ESG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은 어디입니까.



현재 절반 이상의 기업이 별도 ESG 조직을 꾸렸다. 그 외에는 기존의 CSR이나 IR 부서에서 추가 업무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NOTE

WHO ESG 부서를 운영하거나 관련 실무 담당자가 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8곳의 ESG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TIME 지난 4월 00일부터 00일까지 며칠간 모바일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3

ESG 부서 구성은?



3년 전부터 ESG 조직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곳도 23.7%나 되지만 40여 개 기업은 최근 6개월 사이 조직을 신설했고 임원은 10명 미만이 많았다. 조직의 중요도가 반영된 듯 부서 총괄 책임자 직급은 부사장급인 곳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사장급인 곳은 11.9%였다.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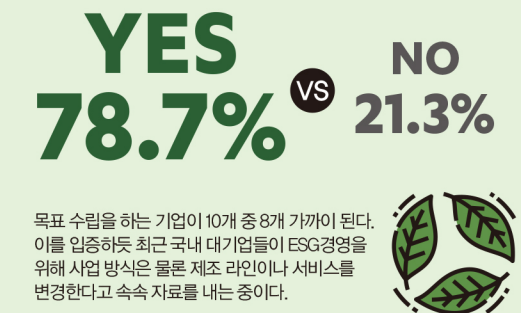
ESG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위원회까지 조직한 기업은 응답자 중 37%로 낮지만 ESG 경영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속도를 내는 기업들 중에는 국제 표준 이니셔티브 가입 추진이나 ESG 채권을 발행하는 곳도 상당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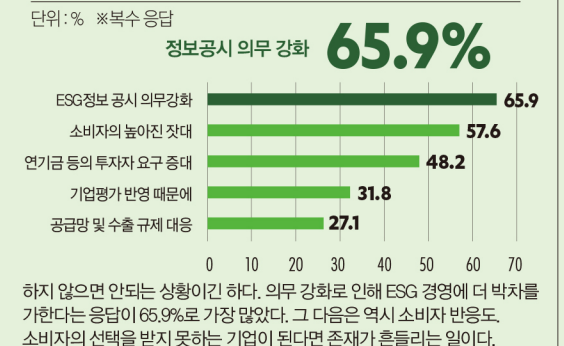
Q5

ESG 관련 연간 목표 및 계획 수립 하나요?



Q6

ESG 경영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환경 관리에 사활 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물 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다.
환경이 살아야 이들 산업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물이다. 제조 과정에 상상 이상의 물이 소요된다. 삼성전자 경기 기흥·화성·평택캠퍼스에서 하루 필요한 물은 평균 약 26만8000t,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도 매일 수십만t의 물을 쓴다. 반도체 웨이퍼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할 때 초순수(수중 오염물질을 모두 제거한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 대표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공정이다. 먼지 한 개만 가라앉아도 품질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물이 오염·고갈되면 공장도 멈춰 선다. 이들 기업이 물 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물 전문가까지 영입

삼성전자에는 '수(水)물리에'로 불리는 물 전문가가 있다. 구태완 삼성전자 SP(시니어 프로페셔널)다. 포스텍 환경공학대학원에서 생물학적 수처리를 연구한 뒤 2019년 삼성전자에 합류한 그

는 필요한 물을 각 공정에 보낸 뒤 정화하는 과정까지 관리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2020년 9월 영국의 카본트러스트로부터 '물 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용수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을 최적화하고, 멤브레인(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 기술을 도입해 고농도 폐수를 정화해 사용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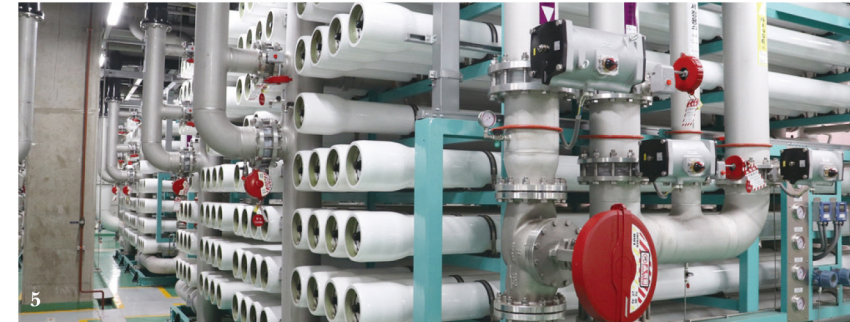
물을 아껴 쓰고, 깨끗하게 쓰는 게 삼성전자의 물 관리의 핵심이다. 2019년 삼성전자의 용수 재활용률은 51%였다. 사용한 물의 절반 이상을 다시 쓴 것. 삼성전자는 10년 이상 수자원을 아껴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3R(reduce, reuse, recycle) 활동도 벌여 왔다. 용수 절감 정도는 각 사업장의 경영평가에 반

영된다. 공정도 꾸준히 개선해 물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도록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 DS부문의 용수 재이용량은 하루 16만t에 달한다. 화성 시민 85만 명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규모다. 지난 5년간 재이용한 물의 양은 약 2억3000만t으로, 경기 하남 팔당댐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재활용하지 않는 물은 정수해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이 과정에서 하천 환경이 복원된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면 건천화(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하천이 마르는 현상)로 인한 수

질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흥·화성·평택캠퍼스는 매일 평균 21만 9000t의 정화된 물을 하천에 방류한다. 기흥사업장 부근 오산천의 생화학적 산

물 없으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불가능...
깨끗한 용수 방류해 하천 복원
탄소중립 2050 달성 위해
저감 노력ESG 앞세워 중국 등
후발주자와 차별화도



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그린동.

2.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 있는 재이용 방류수 저장 저수지.

3. 삼성디스플레이의 용수 재이용 시설.

4.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 재활용 수거함.

5. 삼성디스플레이의 용수 재이용 시설.

소 요구량은 2017년까지만 해도 3급수에 해당하는 5.2ppm 수준이었다. 삼성전자가 정수한 물을 내보낸 뒤 1.4ppm(2급수)까지 낮아졌다. 수달, 원앙, 도토리거위벌레 등 보호지정 동물이 이곳에서 발견된다.

폐수처리 특허 준비 중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캠퍼스에는 '그린동'으로 불리는 첨단 폐수 정화시설 8개가 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된 물을 내부 기준 여섯 가지로 분류해 각 단계의 성질에 맞는 공법과 기술을 적용해 정화한다. 정화된 물에 포함된 각종 성분은 법정 기준치의 30% 수준으로 더 간간하게 관리한다.

삼성전자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평택캠퍼스 그린동을 처음 공개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평택캠퍼스는 수처리 시설 규모도 최대 수준이다. 단면적만 3만4000㎡(약 1만285평·지하 수처리 시설 기준)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면적의 약 3.7배 크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약 5만4000t의 폐수를 정화한다. 용인 캐리비안베이에서 하루 사용하는 담수량(1만5000t)의 약 3.6배 규모다. 각 공정을 통제하는 중앙통제실(CCR)에서는 폐수 정화부터 방류까지 모든 폐수처리 과정과 방류한 물의 품질을 모니터링한다. 전체 업무의 약 97%가 자동화돼 사람의 실수가 개입할 위험이 거의 없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약품이 이동하는 배관설비 앞에 지하철 승강장에 쓰이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약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약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장안전관리(PSM) 기준 고위험 약품인 메탄올은 복합유기탄소로 바꿨다. 폭발 위험이 있는 메탄올 대신 유기처리할 수 있는 물질 배합을 연구해 대체했다. 탈취 설비에서 쓰이는 황산은 오염물질로 분류된다. 삼성전자는 황산 대신 유독성 없는 인산을 쓰고 있다. 미생물을 활용한 수처리 방식도 연구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폐수처리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 특허를 출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에 인공 식물섬 조성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를 ESG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비상장사여서 발행 의무가 없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전담 부서를 꾸리고, 회계법인 등에서 관련 컨설팅도 받았다.



문두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형 ESG 지표가 나와야 할 때

● 문두철 연세대 부원장은 한국 사회에 맞는 ESG 지표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위주의 ESG 평가 기준이 한국 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point ①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는
ESG 지표 적용해야
피해 생기지 않을 수 있어

point ②
눈에 보이는 ‘착한 활동’보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바탕한
ESG 활동에 집중해야

기업의 ESG 담당자라면 글로벌 평가 기관 결과에 고개를 갸웃거리기 일쑤다. 기업은 하나인데 ESG 등급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하루 사이에 확 바뀐 것도 아닌데, 평가기관에 따라 ESG 점수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문두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경영대 교수)은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는 ESG 지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가까이 회계학을 연구한 ‘재무전문가’다. 숫자에 익숙하던 그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관심을 가진 건 2010년 무렵. 당시 국내에선 ESG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지만, 미국에선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다. 문 교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와 지속가능성 여부가 매출·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한 투자의 핵심 요소가 돼 가고 있다”며 “한국 기업 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 평가사들이 만든 지표가 주요 결정의 판단 잣대가 된다면 기업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까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하나인데, 등급은 여러 개

문 교수는 기업이 어떤 ESG 지표를 믿어야 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톰슨로이터의 평가 결과조차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서 ESG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어떤 등급을 신뢰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은행을 예로 들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환경 부문에서 모건스탠리로부터 ‘B’를 받았지만, 톰슨로이터 평가에서는 ‘C’를 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우리은행에 ‘C-’를 줬다. 문 교수는 “자동차·석유화학·중공업 등 ‘중후장대’ 산업에 비해 환경 부문이 덜 중요한 금융업에서조차 등급이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평가 기준이 전혀 다른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관 평가가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지수’에서 제외됐다. 이 지수는 MSCI의 ESG 평가에서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산출한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ESG 우수 기업이지만 지배구조(G) 부문에서 발목이 잡혔다. 문 교수는 “MSCI, 톰슨로이터 등의 평가에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하나만 뒤떨어져도 전체 점수가 곤두박질친다”며 “해외보다 오히려 기

CEO TALK

문두철 부원장의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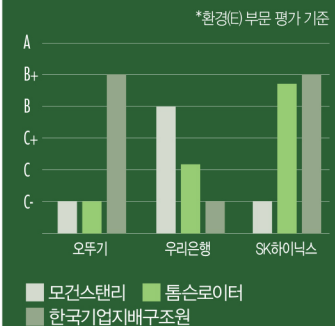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ESG 전략 짜라

문두철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경영대 교수)은 “국내 기업의 ESG 활동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는 ESG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기업인데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등급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잦다”며 “미국·유럽 기업 중심의 기준을 한국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기관의 이해 부족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눈에 즉각 보이는 ‘착한 활동’을 하는 기업보다 핵심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ESG 전략을 짜는 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실질적 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rofile

1995년 미국 위스콘신대 석사 졸업
2001년 미국 뉴욕시티대 박사 졸업
2007년~연세대 경영대 회계 전공 교수
2018년~동반성장위원회 공공기관 평가위원
2021년~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2021년~한국중소기업학회 차기 회장

기관마다 엇갈리는 ESG 평가 등급



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아무리 환경·사회 점수가 우수해도 항상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기부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영업이익 대비 기부 비율이 도요타·혼다 등 일본 완성차업체보다 높다. 하지만 톰슨로이터 ESG 평가에서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모건스탠리는 아예 평가 때 기부 이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문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의 기부·사회공헌 사업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며 중요하게 여기지만, 글로벌 평가기관은 이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형 ESG 지표’ 활용해야

문 교수는 ‘한국형 ESG 평가 기준’을 적극 활용해야 제대로 된 ‘ESG 우수 기업’을 골라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경영 환경, 사회적 맥락 등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유럽 평가기관도 유럽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등을 고려해 자체적 지표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에는 눈에 보이는 ‘착한 활동’보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ESG 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문 교수는 “당장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는 데 급급하기보다 기업이 핵심 사업과 연계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ESG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에서 대세가 된 ESG 투자

ESG 선도기업으로 글로벌 자금 몰리는
지각변동 일어나고 있다. 책임투자원칙에
서명한 글로벌 기관은 무려 3000곳, 운용자산은
89조달러에 이른다.

“화석연료 관련 매출 비중이 25% 넘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글로벌 주요 기업 CEO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블랙록은 작년 말 기준 8조 6800억달러(약 9500조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핑크 CEO는 “글로벌 자본이 ESG 선도 기업들로 향하는 투자 지형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객의 우선순위에서 기후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블랙록 “ESG 못하는 기업 투자금 회수”
블랙록의 선언은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가 대세가 됐음을 보여준 대표적

인 예다. 블랙록은 기업들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핑크 CEO는 “탄소중립 전략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투자금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인권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투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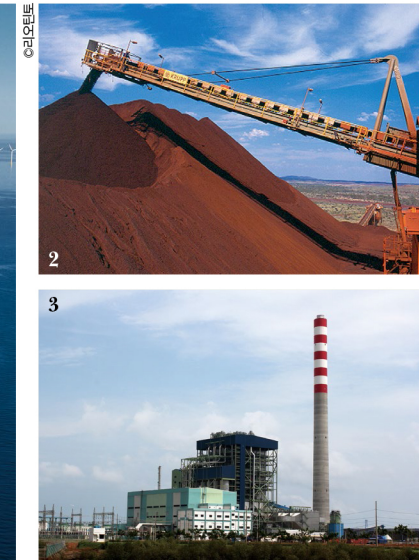
기업의 ESG 요소를 검토·분석하는 것은 기관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가 됐다.

ESG 투자에 울고 웃는 기업들

ESG 투자는 유엔이 2006년 발표한 책임투자원칙(PRI)에 뿌리를 두고 있다. 책임투자원칙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3월 기준 PRI에 서명한 글로벌 기관은 약 3000곳으로 이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ESG로 투자 지형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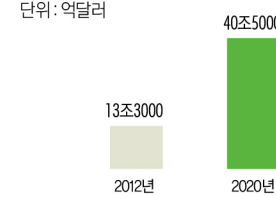
©리오티토

2

3

글로벌 ESG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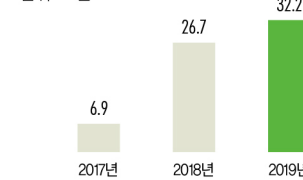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자료: GSA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액

단위: 조원



자료: 국민연금

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89조달러(약 10경5500조원)에 이른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ESG 투자가 집행된 규모는 작년 말 기준 40조5000억달러(약 4경57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2년(13조3000억달러)과 비교하면 8년간 세 배로 늘었다. 글로벌 기관들은 ESG 투자원칙을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호주의 광산 기업인 리오티토는 지난해 5월 철광석 광산 확장을 위해 한 동굴을 폭파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동굴은 4만6000년 전 호주 원주민 유적지였다. 주요 연기금과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사회적 가치를 저버렸다’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리오티토는 CEO 등 최고위 임원 3명이 옷을 벗으며 백기를 들었다.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은 지난해 2월 6000만유로(약 790억원) 규모 한국 전력 지분을 매각했다. APG는 한전의

1. 덴마크 오스테드의 해상풍력 발전소.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는 석유기업에서 해상풍력 업체로 변신한 뒤 주가가 크게 뛰었다.
2. 호주 리오티토의 철광석 광산. 호주 광산업체 리오티토는 원주민 유적지인 동굴을 폭파했다가 글로벌 기관들로부터 투자 철회 압박을 받았다.
3.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치르본석탄화력발전소. 네덜란드공적연금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했다.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블랙록도 한전에 서한을 보내 지분 매각 가능성을 경고했다. ESG 투자로 수혜를 본 경우도 있다. 덴마크의 국영기업 ‘동(DONG)에너지’는 2017년 사명을 ‘오스테드’로 바꿨다. 석유사업부는 매각하고 해상풍력 발전을 주력사업으로 삼았다. 그러자 글로벌 ESG펀드의 투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2016년 270크로네 수준이던 오스테드 주가는 지난해 1100크로네까지 올랐다.

올해만 ESG펀드로 8000억원 유입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들도 ESG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투자 대상과 관련한 기금 관리·운용에서 ESG 요소를 자율적으

글로벌 기업과 재생 에너지

●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재생에너지 대체가 빅이슈다.
2050년 이전에 탄소에너지 사용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RE100 캠페인 때문이다.
꼭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내의 기업 경영 현장에서 ESG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ESG를 재무적 성과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경영 지표로 여기고 있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ESG 성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RE100(Renewable Energy100) 캠페인은 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캠페인은 2050년 이전에 필요한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 약속이다. 2014년 비영리단체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처음 제시했다. 출범 초기만 해도 RE100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기업으로선 비용이 많이 들고 꼭 해야 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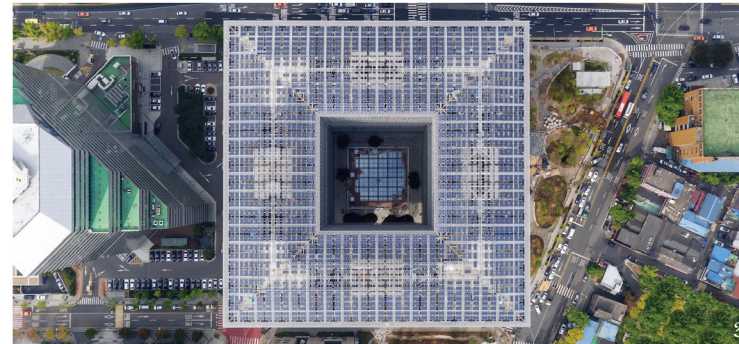
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엔 RE100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2015년 50개였던 RE100 참여 기업은 지난 1월 기준 285개로 6년 만에 여섯 배 가까이 증가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7%인 155TWh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재생에너지 저렴한 미국, 유럽이 주도

RE100을 주도하는 건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다. 올 1월 기준 RE100에 참여한 미국 기업은 79개다. 유럽에선 116개 기업이 참여했다. 미국과 유럽 기업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아시아에선 일본 기업이 46개로 비교적 많다. 한국 6개, 대만 6개, 중국 6개 등 나머지 아시아 국가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재



2 원화



3 원화



285

RD100 참여기업 수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미국(79개), 유럽(116개)에 이어, 아시아 기업(70개) 등 총 285곳에 이른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다.

생에너지 대체 목표 이행률 역시 영국(57.8%) 미국(57.7%) 독일(39.7%) 등 미국·유럽 기업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런 격차는 왜 생기는 걸까.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격차는 발전에 필요한 총비용(사회·환경적 부담 포함)을 전체 발전량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발전비용(LCOE) 통계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의 육상풍력 LCOE는 MWh당 37달러로 브라질(30달러) 다음으로 저렴했다. 또 다른 재생에너지인 고정식 태양광의 경우 MWh당 44달러 수준이다. 석탄(90달러), 원자력(226달러)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의 LCOE에 비해 대폭 저렴하다. 그만큼 전력 소비 방식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바꾸는 게 유리한 환경이란 얘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영국은 육상풍력 LCOE가 45

83

기후행동100+와의 약속을 지킨 기업 수

세계 100대 탄소배출 기업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2017년에 세워졌고 쉘이나 BP 등 현재 167개 기업을 설득 대상으로 넓혔다. 그 중 절반 가량인 83개 기업이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공식화한 것.

1. 대만 신주시 신주과학공원에 있는 TSMC 본사 모습.
2. 한화큐셀이 2014년 영국 케임브리지 스토티지리에 건설한 24.3MW 태양광발전소.
3. 아모레퍼시픽 웅산 신사옥 옥상 태양광 패널.

달러, 고정식 태양광은 71달러다. 원자력(230달러)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탈원전 국가인 독일의 육상풍력 LCOE는 50달러로 석탄(156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반면 아시아 국가에선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력·원자력발전에 비해 비싼 편이다. 한국의 경우 육상풍력의 LCOE는 105달러, 고정식 태양광은 106달러다. 석탄화력발전(62달러)보다 비싸 에너지 사용 구조를 전환하는 데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RE100 참여율이 높다. 미국과 유럽은 전기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제조업 비중이 아시아권 국가보다 작은 편이다. 미국 영국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평균 15%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선택

그런데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RE100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글로벌 대형업체들부터 ESG 경영의 일환으로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작년 7월 자사 제품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에어팟 등 모든 자사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협력업체에도 탄소중립(넷 제로)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탄소 절감 효과를 높이려면 협력업체 전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brief 2

CSR, ESG 뭐가 다를까?

● 알맹이는 같은데 포장만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은 분명히 다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불리던 개념이 지금은 ESG로 통칭되면서 경영의 방향성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

CSR vs.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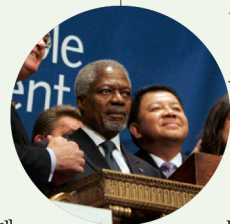
의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부가 활동	의미 기업 경영 전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 도입
실행 방법 봉사,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법 기업 경영 및 재무 활동에 ESG 가치 연동
효과 기업 평판 향상	효과 투자자 신뢰 형성, ESG 지수 상향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ESG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로 다른 말인가요?” ESG를 처음 접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다루는 ESG의 개념이 사회적 가치(SV: social value) 실현을 추구하는 CSR과 비슷해 보여서다. 두 개념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ESG의 개념을 실제보다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CSR은 시장실패에 대한 기업의 책임론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기업은 CSR을 실천하며 좋은 평판을 쌓고, 평판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한다. 이에 비해 ESG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윤 등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까지 기업 경영의 목표로 삼는다. ESG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조직 구조를 바꾼다. CSR이 기업 경영의 한 요소였다면, ESG는 기업 경영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 공헌의 역사

1600년대 후반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한족 상인들은 하오시(好施)라는 자선 활동을 통해 상권을 확장했다. 18세기 조선의 여성 기업인 김만덕은 제주도에 대기근이 닥치자 전 재산을 털어 사들인 쌀로 제주도 백성을 구제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베푼 역사 속 사례에서 오늘날 CSR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CSR 개념이 정립된 건 1950년대 들어서다. 미국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은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CSR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반인에게 CSR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다.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가 제프 밸린저는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발하면서 CSR을 기업 평가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 ESG 경영 시대로 인도하다

ESG 개념이 등장한 건 2000년대 초반이다.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2004년 세계 각국 금융회사에 지구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가치를 비중 있게 다뤄 달라는 요청이었다. 2006년에는 ESG 가치가 적용된 ‘유엔 책임투자 원칙(PRI)’이 정립됐다. 이때부터 ESG 가치가 본격적으로 기업 경영을 위한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앞다퉈 ESG 관련 조직을 창설하고, 대외적으로 ESG 경영을 주창한 건 비교적 최근 일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ESG 경영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환경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 기업 경영의 목표 자체를 ESG 가치와 연동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빠르게 붕괴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목격한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은 ESG 가치를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CSR은 ‘책임’, ESG는 ‘성과’에 방점

ESG와 CSR은 SV에 대한 접근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CSR은 환경 오염, 빈부 격차, 계층 갈등 등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시작했다. 기업은 자발적인 CSR 활동을 통해 SV를 실현하고 그 대가로 좋은 평판을 얻는다. 기업은 CSR을 통해

경제적 토대인 사회와 호혜적 관계를 다져나간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은 SV 실현을 기업 경영에 내재화한다. 기업 경영 목표를 ESG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최선의 ESG 성과를 얻고자 한다. 분야별 ESG 점수를 매출, 영업이익 같은 성과지표와 동일하



용사 블랙록이 지난해 기업 경영에 관련한 건수는 5107건이다. 기업 경영 관여를 ESG 요소로 구분하면 지배구조에 대한 관여 건수는 2882건으로 56.4%에 달했다. 환경(1260건, 24.7%) 사회

(965건, 18.9%)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중동의 금융 중심지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최근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여성 임원을 최소한 한 명 이상 두는 조항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압둘라 빈 투크 UAE 증권거래소(SCA) 이사회 의장 겸 경제장관은 “UAE 시장이 최소한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SG는 기업 투자 지표가 된다

투자자들은 재무적 성과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한 기업 평가 항목으로 삼기 시작했다. 정량적으로 산출된 기업의 ESG 지표를 투자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CSR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것과 다르다.

국제회계 표준인 ‘IFRS’를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올해 초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회계학회에 SSB(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설립 관련 의향서를 보냈다. 올해 상반기 SSB를 출범시켜 새로운 ESG 회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IASB에서 본격적으로 ESG 회계 표준 제정에 나선 만큼 국내 업계에서도 기업 평가 지표로서 ESG의 활용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업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 ESG 점수를 높이려면 평가사들의 가이드라인을 모범답안으로 삼자.
매년 달라지는 평가 비중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자세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200여 개 글로벌 ESG평가사는 매년 또는 분기마다 기업의 점수와 등급을 발표한다. 성적표가 나오면 기대보다 저조한 점수에 실망하기도 한다. ESG 점수가 낮으면 그만큼 투자받을 기회도 줄어든다. 하지만 평가 과정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 왜 이런 점수를 받게 됐는지 궁금하고, 때론 막막하다. 그럴 때는 평가사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모범답안으로 삼는 것이 좋다. 평가사들이 제시하는 모범규준과 구체적인 평가 질문을 분석하면 '우리 회사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매년 바뀌는 기준과 평가 비중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One Point Lesson

4

원칙에 충실한 것이 최선! ESG 평가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답을 할 것. 단, 매년 달라지는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좋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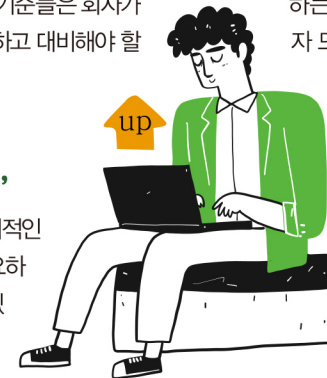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 ESG평가사들이 제공하는 모범 가이드라인을 분석해야 한다. 평가사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에 자사가 기대하는 바를 자세히 알려준다.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와 구체적인 질문을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가령 S&P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측정(CSA)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다양성' 부문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및 혁신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사회 여성 사외이사과 비상임이사 수를 구체적으로 묻는다. 이사회 내 여성 이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직원 대표와 사내 고위 간부는 제외된다.

'위험 관리'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름 유출 등 사고로 인한 신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관리하는 효과적 제도가 있어야 하고,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모든 임직원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모범규준을 제시한다. 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위험 관리 성과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여부, 위험 관리 규율을 교육하는 심층 트레이닝 프로그램 존재 여부, 인사평가 시 위험 관리 성과를 측정하는지 등을 묻는다.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상급 책임자와 현장 담당자를 나눠서 물어보기도 한다. 이런 자세한 평가 기준들은 회사가 ESG 등급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수 과제'인 셈이다.

기준 변화는 민감하게 '팔로업'

그렇다고 해서 평가사들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 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기준이 덜 중요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해당 기준이 없어지기도 한다. ESG 담당자들이 항상 평가사의 기준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한정된 회사의 자원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P글로벌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올해 평가에서 '지배구조' '공급망 관리'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씩 줄었다. '생물다양성'은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배구조, 공급망관리, 직원의 건강 등에 투입했던 돈과 인력을 일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배분할 수 있다. 평가사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곧 ESG 전략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 근거를 달아라

평가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는 공식처럼 항상 이를 증명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평가사들은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수를 기입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 홈페이지 링크를 함



께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직원 1인당 봉사활동 시간과 사회공헌 비용 등 기업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자료들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이 좋다. 허위 기입이나 '실적 뺑뺑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적 데이터를 기입할 때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측정됐는지를 자세히 적어줘야 한다. 예컨대 중대재해 건수는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기준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측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 데이터와 연도별 비교가 어려워지면 이 같은 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일부 평가사는 평가 과정에서 기계적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숫자나 이에 따른 근거가 없으면 '0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